

**Q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이에 따른 문체부와의 관계정립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예정이신가요?**

- 위원회 전환 초기 목표로 하였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영 방식의 단계 설정이 중요함. 우선 위원회 체제를 전환 당시인 1기 수준으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위하여 관련 법률을 현장 예술계와 함께 힘을 모아 2019년까지는 개정을 완료해야 함. 이러한 과도기적 운영형태를 거쳐야 블랙리스트제도개선위원회가 권고한 국가문화예술위원회로 나갈 수 있음.
- 문체부의 간섭에 대하여 끊임없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소통을 하면서 예술위가 독립적인 주체로 활동하고 지원업무를 해야하는 것을 주지시키는 방법 외에 특별한 대안은 없음. 문체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예술위와 현장간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예산편성과 정책수립의 독립성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인권위원회나 방송위원회 사례를 충분히 검토하여 대통령 직속 국가예술위원회의 발족이 반드시 필요함.
- 외부적으로 문체부와의 관계를 직무협약 방식으로 바꿔 예술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 해야하는 일, 해서는 안될 일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를 내림과 동시에 자율운영 체제를 보장받아야 하며, 내부적으로는 감사실의 운영체계 확립을 통해 감사와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지원사업 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심사팀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Q2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권고에 따른 직원 징계방안과 예술현장의 신뢰 회복을 위한 사무처의 조직혁신 방안에 대하여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2018년도 내 징계절차를 반드시 마무리 하여야 함. 이와 더불어 공연장이나 미술관, 자료원 등 예술위가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여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아르코비전 2030을 수립하여 그 틀에 맞는 조직개편도 이루어져야 함.
- 현장 참여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무처 주요 직위를 예술현장에 개방하고, 예술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장기적으로 문체부 산하 예술지원기구들의 통합운영도 고려해야 함.
- 무조건적인 징계 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징계의 원칙을 수립하고, 합당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사무처 조직의 혁신을 위해서는 예술위 내부 직원의 예술장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통해 현장과의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징계 기준을 명확히 하여 죄의 경중을 따짐과 동시에 사기가 저하된 직원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함. 또한 행정편의 위주가 아닌 현장 중심의 예술활동을 지원 할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설명회에서 한발 더 나아가 예산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원서에 예술위에 바라는 점을 기재하도록 하여 이를 분석하며, 예술인들과의 교류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현장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음. 또한 예술인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정부나 국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에게도 예술에 대한 사회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Q3. 심의과정의 공정성 확보, 공정한 심사기준 마련, 장르에 적합한 심사위원 Pool 확보 등 지원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방안은 무엇입니까?**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심사위원을 역으로 예술인들이 평가 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심의의 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음부즈만 제도를 강화하여 현장의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심의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일반 관객 등 참관인이 있는 공개심의제도 및 심의자료 심층검토제를 도입하여 심의제도의 개방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원외압신고제를 활성화하는 등 내부 감사기능을 강화해야 함.
- 심사위원에 평론가, 현장예술가, 향유자를 일정비율로 배분하여 다양한 의견 교환과 합의를 통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심의제도를 보완해야 함.
-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전적으로 공개하여 현장에서 충분히 납득할 만한평가인가를 판단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심사위원 풀에서 퇴출시키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함.
- 감사실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심사팀을 별도로 신설하여 심의에만 전념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것음. 청탁배제와 심사의 공정성 마련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외부 청탁에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음.

**Q4. 경제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산확보에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십니까?**

- 예술나무 2.0 활동을 통한 예술기부 확산,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을 통한 복권기금의 법적배분 제도화 및 용도 확대, 지역 문화재단이나 광역기초문화재단들과 펀드레이징 등 협업을 통한 전사회적 메세나 운동을 전개하여 예술인들의 창작여건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음.
- 문화 분야 기금을 통합운용하여 예술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복권기금,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안정적 전입을 위한 기관 협의를 추진하겠음. 또한 국가 재정 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영역의 기부 확대를 통한 재원확보 노력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음.
- 예술나무 운동을 국민운동 차원으로 확산하여 예술위 사업비의 30% 수준까지 민간 기부금을 확대하겠음.
- 국가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을 통해 기금이 아닌 독립된 예산을 국고로 지원받는 형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단기적으로 복권수익금을 정률배분제로 전환하여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여 향유자 뿐 아니라 창작을 위해서도 쓸수 있도록 해야하고, 장기적으로 문화세 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해야 함. 또한 예술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예술가들이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

Q5. 최근 e-나라도움으로 촉발된 예술지원 방식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고, 예술을 예술답게 보지 않고 있는 현재 e-나라 도움의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당장의 폐지는 어렵기 때문에, 세부 예산항목까지 일일이 구분하여 쓰지 않도록 입력절차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단순화거나 나아가 폐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e-나라 도움의 활용에 대한 컨설팅이나 어시스트를 해줄 수 있는 체계를 예술위 내부에 구축하여 예술인들의 행정편의를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장기간 창작이 필요한 예술장르는 e-나라 도움 사용에 대한 예외 조항을 만들어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함.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은 일정기간 인정하더라도, 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e-나라 도움 적용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겠음.
- 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지원대상자는 e-나라 도움 적용에서 제외하고, 콜센터 운영 및 원격지원시스템 도입을 통해 예술인들의 행정편의를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Q6. 장르와 지역을 넘어 예술인들의 협력과 교류를 강화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 다양한 장르의 소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예술위원회가 구성하는 한국지역문화 지원협의회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함.
- 국가권력 주도의 '예술진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자율, 분권, 협치'에 기반한 예술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술지원 전반에 걸친 협치 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수립-집행-평가 단계별 현장소통을 강화하겠음.

- 장르별 예술가들과의 진성성 있는 설득과 소통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서로 다른 장르의 예술가들이 현안을 공유하는 모임을 만들어 소통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음
- 장르와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사업의 조정과 통합을 통해 사업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이를 통해 예술인들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Q7. 현재 예술위원회의 지원체계가 예술인들의 창작주기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공급자 중심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신진, 중견 등 활동의 성숙도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예술인의 삶에 호응하는 예술지원정책에 대한 구상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 창작산실 등 예술위 주요 프로그램을 브랜드로 지속시키는 가운데 보조금 지원에서 나아가 컨설팅 지원, 공간지원으로 지원방식을 입체화하고 창작단계별 연속지원, 경력주기 별 맞춤 지원으로 지원 효과를 높여나가겠음.
- 현재 1년 단위로 이루어지는 행정편의적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생애 주기별 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겠음.
- 예술 지원 대상을 청년-중년-노년으로 구분하고 그에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하도록 하겠음. 특히 중년이상의 예술가들이 꾸준히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음.
- 우리나라 예술지원에서 취약한 부분인 창조적 실험장르의 신진예술가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원로예술가들에게는 그들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찾아 지원하는 등 예술인 수요 맞춤형 지원 방식을 개발해야 함.